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	
		배포일자	2022년 8월 18일(목) 총 3매		
담당 부서	에너지정책과	담 당 자	• 해상풍력팀장 유강환 ☎458-7136 • 담 당 자 이병일 ☎458-7137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해상풍력 발전사업 민관협치로 풀어간다

- 18일,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-

- 지역 상생, 발전사업 이익공유 방안 등 이해관계자 소통과 갈등 조정 역할 수행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‘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’ (이하 민관협의회)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지난해 말과 올해 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진행된 주민 협의체 및 어업인 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민, 어업인, 정부기관이 포함된 통합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. 또 지난 3월과 7월에 진행한 ‘숙의경청회’에서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과정도 거쳤다.

이를 통해 시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,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, 웅진군 부군수 등 정부위원 5명과 지역 대표, 조업단체 대표, 수협 추천인 등 민간위원 1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. 앞으로 공익위원이 선정되면 20명 내외로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, 해상풍력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.

이번에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민주성, 투명성,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, 지역주민, 어업인,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협의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. 동시에 지역 상생방안 및 발전사업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완화시키는 매개체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.

이날 회의에서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사업현황과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조사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, 질의 및 의견제시를 통해 자문을 진행했다.

그 밖에 민관협의회 운영규정과, 공익위원 선정방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향후 민관협의회 운영의 기틀도 마련했다.

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“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필수적이고, 특히 지역주민·어업인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이해를 구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”임을 강조하며 “향후 사업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